

통합 재정사업 평가의 사업별 감액 판정은 집행 적정성, 재정지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.

<보도내용>

- '26.7.1. 매일경제는 「마약수사부터 장병격려까지, 기획처, 내년 예산 감액 요구」 제하의 기사에서
 - “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평가에서 법무부 마약 수사와 국방부 장병 격려 등 주요 핵심 사업들이 감액 권고를 받았다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통합 재정사업 평가 주요 내용>

-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그간 운영되던 자율평가*의 관대화 경향, 예산 환류 미흡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, 평가의 객관성·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, 외부 전문가 중심**의 평가로 도입되었습니다.
 - * 부처가 소관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객관성·신뢰성이 부족하고 재정운용에 대한 환류 미흡 등 평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
 - ** 총 153명의 외부(민간)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함과 동시에, 평가위원의 약 10%를 시민사회(직접참여+추천인사)에서 위촉하여 “국민의 눈높이”에서 낭비·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
- 또한, 평가는 재정사업의 ‘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’가 아닌 ①재정사업 필요성, ②사업계획 및 ③집행 적정성, ④재정지원 성과 등 4대 평가항목을 종합 평가하였으며, 이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감액 판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.

- 기사에서 언급된 사업별 감액 판정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, 사업 대상이나 목적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 사업의 추진단계에서 집행 적정성 등이 미흡하여 감액 판정을 한 것으로서, 집행부처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집행방식 및 사업구조 개선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
부처	사업명	감액 판정 주요 사유
산업부	투자유치 기반조성	▶ 최근 3년간 지방비 매칭 부족, 수도권 집중에 따른 기업 지원을 하락 등에 따른 '25년 집행률 71.4% 등 집행 부진
유산청	조선왕릉 보존관리	▶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70~80% 수준으로, 지자체 인허가 협의 지연 등에 따른 대규모 불용 및 이월이 반복
국방부	장병격려	▶ 위로금 등의 만성적 불용과 수혜 대상 추계의 정밀도 미흡 등 관행적 예산 편성이 지속
법무부	마약수사	▶ 검찰 수사기능 개편과 연계하여 최근 급격히 증가한 자산취득비를 중심으로 예산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므로,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수사인프라 확충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
과기부	ICT규제 샌드박스	▶ 6개 부처 8개 규제샌드박스간 중복 방지를 위해 운영체계를 고도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축하고, 기업대상 실증·시장출시 지원과 AI 국제 표준 모니터링·컨설팅 등 중복의 여지가 있는 내역사업 효율화 필요
복지부	한의약 해외진출지원	▶ 민간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수입과 기업수출 이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수익사업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20%로 낮아 민간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이 필요
복지부	노인건강관리	▶ '24년도 실집행률이 82.7%, '25년도 실집행률이 88.5%로 저조 및 예방·교육·치료비 지원이 혼재되어 있는 등 자원배분의 우선순위와 집중 전략이 부족하고, 자원 배분의 계량 근거, 비용 구조, 지역별 수혜 분포 등 근거가 미흡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통합평가과	책임자	과 장 이만구 (044-214-3250)
		담당자	사무관 박재홍 (jwpark1202@korea.kr)